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에 대한 세종시장의 입장문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제 밤,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현대사의 굴곡을 넘어 이룩한 이 위대한 나라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윤석열과 반국가세력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맨 몸으로 저항한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대한민국의 반역자가 되었으며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운영 책임자의 권한과 지위를 상실했다.

이 중차대한 사변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장은 반란군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이 아닌 우리 헌정질서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신의 유일한 성공 추억인 ‘꽃박람회’가 시의회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세종시장이 계엄 포고령 제1호의 1항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진심으로 반란이 성공하기를 기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종시장 입장문>에 적시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 구도와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가 의미한 바는 의회의 폐지 또는 시장의 독재를 강화하자는 의도 외에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대한의 통치이념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부정하는 세종시장은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세종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이미 계엄 선포 행위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었다고 규정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내심에 따라 40만 시민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을 벗고 즉시 용산의 바리케이드로 들어가 국민에게 저항하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반국가세력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끝으로 경고한다. 시의회의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해 삭감된 축제 행사를 ‘자율성’으로 포장한 채 강압과 위력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모금 행위, 공직자 강제 동원, 기업인에 대한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12. 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조상호